

---

# 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정책 방향

---

2022. 10. 18.

관계부처 합동

# 목 차

I. 추진 배경 ..... 1

II. 기존 소재 · 부품 · 장비 정책 평가 ..... 2

III. 새정부 소재 · 부품 · 장비 정책 방향 ... 4

IV. 향후 계획 ..... 10

# I. 추진 배경

## ◇ (과거) '19년 日 수출규제는 우리 소부장산업 도약의 계기로 작용

- 日 수출규제는 글로벌 공급질서를 흔드는 전례없는 충격이었으나, 우리경제는 민관의 순발력 있는 대응으로 부정적 영향 최소화
- 소부장특별법 전면 개정, 특별회계 신설, 소부장경쟁력위 출범 등 범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對日 위주 유의미한 성과 창출

### < 소부장 정책 주요성과 >

- ① 100대 핵심품목 對日 의존도 6%p 감소('19 30.9% → '21 24.9%)
- ② 100대 핵심기술 기준 매출 4,134억원, 고용 2,381명 등 창출
- ③ ①매출액, ②시장가치 상승 등 소부장 기업성장 가시화  
\* ①매출증가: (전체)16.3% vs. (소부장)24.1% ②소부장 중소·중견 1조원클럽 13→34개사
- ④ IP R&D 연계 의무화로 총663개 중소·중견 특허전략 지원 → 특허출원 1,065건  
⇒ "소부장 對日의존도 역대 최저(15.4%) 기록"(7.20일, 연합 등 12개 언론 보도)

## ◇ (현재) 라-우 전쟁, 요소 수급난 등 공급망 위기 상시화는 새로운 도전

- 최근 ①코로나 19, ②요소수 사태, ③車 반도체, ④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\*, ⑤중국발 코로나 봉쇄 등 연이은 글로벌 공급차질 요인 발생  
\* 라-우 전쟁의 장기화와 對러 제재로 인해 석유 등 에너지 가격 급변 등
- 특히, 우리나라는 원재료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중심 경제구조로서 공급망 교란의 타격이 경제전반에 확산 가능

## ◇ (미래) 마중 기술패권 경쟁, 탄소중립 등 글로벌 질서전환에 대비 필요

- 첨단기술을 둘러싼 美-中 간 경쟁은 핵심 제조업과 소부장 산업의 자국유치 및 신뢰 가능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구조화를 촉진  
\* (美) 반도체 등 4대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, 동맹국과의 첨단기술연맹 추진  
(中) 자주적인 산업망과 공급망 구축 및 기초 소재·부품·기술 기반 확보 목표 수립
-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 수요확대에 따라 첨단 소부장 시장선점 경쟁 및 탄소 기반 전통적 제조 공급망의 전면적 재편이 촉진  
\* 세계수요 전망('20→'30P): (전기차) 11백만대→227백만대, (이차전지) 288Gwh→3,392Gwh

## Ⅱ. 기존 소재·부품·장비 정책 평가

### ① (對日 한정) 일본 외 타국가와의 공급망 관계에 대한 고려 미비

- 對日 소부장 의존도가 역대 최소(15.4%)를 기록한 것과 달리 對中 의존도는 지속 증가하는 등 기존 정책의 한계 노출
  - \* 對中 소부장 의존도 : ('12) 24.9% → ('22.上) 29.6% (4.5%p ↑)
- '20년 「소부장 2.0 전략」을 통해 對日 100대 품목을 대세계 338+a로 확대한 바 있으나, 구체적 지원수단 부재로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

### ② (단기적·추격형)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 부족

- 과거 소부장 정책은 대일무역 역조개선, 주력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패스트 팔로어 전략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 정책 부족
- 탄소중립, 디지털전환 등 미래 유망 먹거리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할 필요

### ③ (고난이도 기술 중심) 요소와 같은 범용품·원소재 관리에 한계

- 기존 고난이도 R&D 중심의 공급망 지원체계는 ①기술 난이도가 낮은 범용품, ②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
-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소부장 관리범위 확대 필요

### ④ (수출 고려 미흡) 국내 소부장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역량 부족

-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대다수가 국내 내수 의존적이며 해외진출은 매우 저조(소재부품 전문기업 중 97%가 수출실적 無)
- 중간재(소재부품)·자본재(장비) 수지가 악화되는 現상황 고려 필요
  - \* 무역수지(억불) : [중간재] ('18) 1,742 → ('20) 1,268 → (~'22.8) 1,051  
[자본재] ('18) 267 → ('20) 71 → (~'22.8) 1.2

### ⑤ (혁신 생태계 지속 발전) R&D 혁신체계, 협력생태계 구축 등 지속 필요

- 수요기업 참여와 특허전략 수립 의무화, 상용화 지원 등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한 소부장 R&D 지원체계와 협력생태계 확산은 지속 필요
-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추진

◆ 소부장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한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 마련

◇ (정책대상)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유연한 지원 필요

- 커지고 있는 對中 리스크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(A社)
- 최초 선정후, 변경없이 유지된 핵심전략기술의 재검토 필요(B연구원)
- 글로벌 환경 규제(유럽 등) 대응이 가능한 미래 핵심소재 지원 강화(C社)

◇ (R&D) 기존 소부장 R&D 사업의 성과 확산 필요

- 소부장 R&D의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는 수요기업 적용기회가 부족한 중소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로 작용(D社)
- 신산업분야는 특히 대형·패키지과제 중심 지원 필요(E연구원)

◇ (글로벌화) 국내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진출

- 국내 수요기업만을 대상으로는 소부장기업 성장에 한계 → 국내 수요 적용을 기반으로 해외 사업화 지원 요청(F社)
- 해외 바이어들의 높아지는 요구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정책 필요(G社)

◇ (공급망 안정)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

- 그간 글로벌 분업체계를 적극 활용해온 우리나라 무역구조상 민간 중심 공급망 리스크 관리는 한계 →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(H연구원)
-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국내 소부장 기업 지원방안 필요(I社)
- 요소수 수출 금지, 희토류 자원무기화 우려 등 향후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필요한 필수 소재·부품을 엄선하여 지원할 필요(J社)
- 일본 수출규제 유사상황 발생에 대비한 기술자립화 지원 필요(K社)

### Ⅲ. 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 정책 방향

비 전

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생태계 조성

목 표

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

추진  
방향

- ① 기존 소부장 정책대상을 발전적으로 확대·개편
- ② 민간주도, 글로벌 중심의 소부장 협력생태계 확산
- ③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 구축

추진  
전략

① (정책대상) 對日/주력산업 중심  
→ 對세계/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

- ▶ 핵심전략기술 개편(100→150개)
- ▶ 소부장 범위 확대
- ▶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 신설

② (R&D) 기존 소부장 R&D 보완

- ▶ 신산업 R&D 투자 확대
- ▶ 소부장 대형 프로젝트 추진
- ▶ R&D-기반구축 연계 강화
- ▶ 수요기업 참여 확대
- ▶ 표준연계 R&D 의무화

③ (글로벌화) 국내생산기반 확충  
→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

- ▶ 해외 수요-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 확대
- ▶ 글로벌화 사업(인증해외마케팅 등) 연계
- ▶ 기업간 성장사다리 전략 추진
- ▶ '소부장 글로벌화 전략' 마련

④ (협력생태계) 정부중심 수요-공급 매칭  
→ 민간주도 연대·협력생태계 확산

- ▶ 대·중소 협력 활성화
- ▶ 펀드 등 민간투자 확대
- ▶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
- ▶ 소재 데이터 디지털화

⑤ (공급망) 공급망 위기 대응력 미흡 → 종합지원체계 구축

- ▶ 위기감지 모니터링 강화
- ▶ 제도적 기반 마련
- ▶ 소부장공급망 안정사업 추진
- ▶ 통상협력 강화

1 [정책대상] 對日/對주력산업 중심 → 對세계/對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

- (핵심전략기술 개편) 중국 등 對세계 공급망, 미래 먹거리산업 등을 고려하여 기존 핵심전략기술 대폭 확대(100개 → 150개, 안전2 상세보고)
  - 기존 對日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의 진행도, 중요도 변경 등을 감안하여 제외·수정 검토 병행
  -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을 감안하여,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선정하는 방안도 제도화

<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(안) >

반도체 (17개 → 32개)	디스플레이 (10개 → 14개)	자동차 (13개 → 15개)	기계금속 (38개 → 44개)	전기전자 (18개 → 25개)	기초화학 (4개 → 15개)
(기존) 기초소재, 메모리반도체 중심 ↓ (확대) 패키징 등 공정기술, 시스템반도체 기술	(기존) OLED 중심 ↓ (확대) XR, 마이크로 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	(기존) 내연차 중심 (수소차 기술 일부 포함) ↓ (확대) 고속베어링 등 전기차 핵심기술	(기존) 전통 기계산업용 ↓ (확대) 고부가 산업 장비, 기초소재 내재화	(기존) 상용 이차전지 중심 ↓ (확대) 고성능, 고안전 차세대 전지용 기술	(기존) 일본 강점의 정밀화학제품 ↓ (확대) 친환경, 저탄소 (리사이클) 등

\*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 필요 → 바이오 분야 신규 추가(5개)

- (소부장 범위 확대) 그간 소부장특별법의 법률상 정의에만 포함되어 있던 원소재·범용품을 하위법령\*에 개별 소재·품목별로 추가 반영

\* 소부장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(소재부품장비의 범위) 개정 추진

- (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 신설) 핵심전략기술 확대와는 별도로 핵심 원소재·범용품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하여 관리

- 요소와 같이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낮더라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우리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선정

< 핵심전략기술 vs 공급망안정품목 비교 >

		소부장 핵심전략기술	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
공통점		특정국 의존도 및 국내산업 영향도가 높은 품목	
차이점	대상	고난이도 기술 중심	범용품 등 저난이도 기술 포함
	지원	R&D 중심, 세제, 규제패스트트랙 등	비축, 수입국다변화, 국내생산 등
	목표	국내 경쟁력강화	공급망 안정화

## 2 (R&D) 기존 소부장 R&D 성공요인은 유지 → 일부 보완점 혁신

※ ①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, ② IP R&D 연계 의무화, ③사업화(실증·양산 평가) 연계 등

- (신산업 R&D) 기존 주력산업 소부장기술 국산화는 차질없이 추진 하면서, 미래 먹거리 관련 신규 핵심기술 R&D\* 투자 적극 확대

\* 소부장 R&D 신규예산중 신산업 비중(산업부) : ('22) 99억원, 9.3% → ('23) 242억원, 24.0%

- (소부장 대형 프로젝트) 기존의 품목 단위 핀셋형 지원에서 산업 핵심생태계 패키지 지원으로 전환(과제당 50억원 한도 → 패키지 200억원)

- R&D를 통한 생태계 육성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다수품목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간 시너지 극대화

< (예시) 수송분야 소부장 대형 프로젝트 >

핀셋형 품목 지원		생태계 패키지 지원		
개별	레이저 과제(30억)	[목표] UAM, 자율차 등 미래 모빌리티용 4D 라이더 생태계 선점 * R&D에서 실증까지 통합지원	소재	- 화합물반도체 레이저 소재
개별	기계식 스캐너(30억)		부품	- Solid-State 스캐너 개발
				- 고신뢰성 광학기술 부품
개별	디지털신호처리(30억)		공정설비	- 시스템제조 스테이션
		실증	- 라이더 실증평가 장비	

- (수요기업 참여 확대) 취약 품목지원을 위한 '1수요-1공급기업 연계' 에서 분야별 공급망 생태계 선점을 위한 '多수요-多공급 투자'로 전환

- (공통 수요) 공용·확장·파급성이 큰 원소재 및 공통기술은 다수 수요기업이 동시에 참여하여 R&D 결과의 파급성·확산성 제고

\* (예시, 전지) 수산화리튬 등 공통기술은 복수 수요기업 참여시 R&D 지원 우대

- (1차→2차 수요) 산업별 GVC 상 1차 수요기업과 2차 수요기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간재 생태계와 최종재 생태계 연계

\* (예시, 이차전지) 1차수요(L社, 배터리/중간재) → 2차수요(H社, 완성차/최종재)

\* (예시, 섬유) 1차수요(H社, 탄소복합재/중간재) → 2차수요(K社, 항공기/최종재)

- (R&D-기반구축 조기 연계)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보장 및 사업화 기간 단축을 위해 R&D와 기반구축 연계 강화, 동시 기획·사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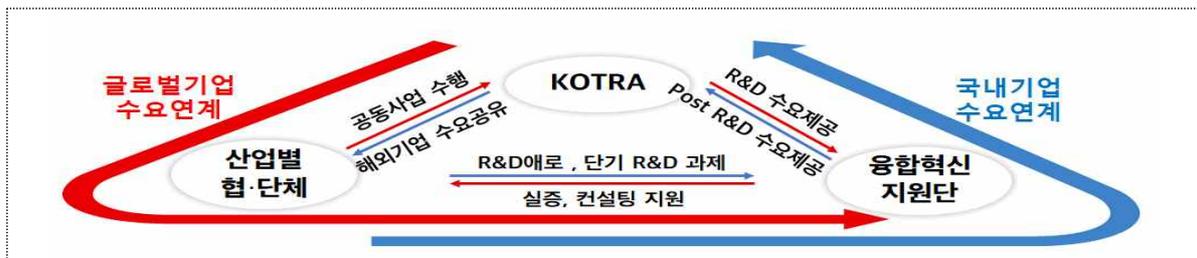
\* (현행) 연구개발 완료 후, 성능·신뢰성 평가 및 실증 연계(가점부여 등) → (개편) 기술개발 과제와 실증화 병행 추진으로 조기 사업화 유도

- (표준연계 R&D 의무화) 불확실한 미래 新생태계 주도권 선점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중 표준화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여 표준연계 R&D 의무화 추진·국제표준 선점

### 3 [글로벌화] 국내생산기반 확충 →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까지 지원

- **(글로벌 협력·진출)** 국내 수요-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, 해외 수요-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&D 등 협력 확대
  - \* 해외기관 참여 신규과제 목표 비중(금액기준): (20) 3% → (23) 10% → (26) 최대 15%
- **(글로벌화 연계)**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글로벌화 지원(인증·해외마케팅 등)까지 자동 연계
  - \* (현행) 기술개발(KEIT)-사업화(KIAT) 연계로 국내 수요 창출 중점 → (개편) 기술개발(KEIT)-사업화(KIAT)-글로벌화(KOTRA) 연계로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
-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글로벌 파트너링(GP) 사업\* 신설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중점 지원
  - \* (현행) 글로벌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매칭되는 국내 소부장기업 발굴 → (개편) 국내 우수 소부장 기업의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매칭되는 수요기업 발굴
- KOTRA, 산업별 협단체 및 융합혁신지원단(37개 정출연) 등 참여 기관의 브릿지형 협업을 통해 해외 및 국내수요의 양방향 진입 지원

<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해외수요발굴 절차 >



- **(성장사다리 전략)** 부처간 분절적으로 운영중인 기업 육성 프로그램\*의 연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소부장 기업 육성
  - \* 스타트업(중기부) - 강소기업(중기부) - 으뜸기업(산업부)
- (선정)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부장 강소기업은 으뜸기업 선정시 우대
- (지원) 강소기업 전용 지원사업\*의 으뜸기업 참여 허용 검토 등
  - \* 중소기업인 으뜸기업 대상 보증 한도 우대 등을 통한 사업화 자금지원(기술보증기금) 등
- **(수출전략 마련)**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,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'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\*' 마련 추진
  - \* 주요국가별 소부장 수출여건 분석, 유망 수출품목 육성 등 포함

**4 [기업간 협력 생태계 확산] 정부 중심 수요-공급기업 매칭**  
 → 민간 주도의 다차원적 연대와 협력 생태계 확산

- **(대·중소 협력 활성화)** 협력모델 등 수요기업 중심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, 실증·기술·인력지원(대학·공공연구 활용) 등 협력 기반 강화
  - \* 공공연 지원강화 : 융합혁신지원단(37개 공공연구)의 장비·인력·기술 활용 기업지원 강화(年 3,000개사)

< 협력 지원 플랫폼 >

구분	지원 내용	참여기관	목표(~'26년)
실증·검증 테스트베드	공공연구 등에 테스트베드 구축 → 기술개발 제품 실증·검증 지원	화연 기계연 등 37개 공공연구	825종 장비구축
신뢰성 향상	공급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상용화 컨설팅, 성능개선 지원	재료연 한지연 등 40개 연구소·TP 등	3,250개사 지원
양산성능평가	상용화 단계 개발제품을 수요기업의 실제 양산라인에서 성능평가	반도체 협회 등 6개 협회·공공연구	1,000개 협력

- 특히, 개별기업간 수행중인 실증평가를 공급망 내 다수 공급기업이  
 동시 참여하도록 개선하여 총 사업화 기간 단축 지원
  - \* (기존) 수요-공급기업 (1:1 매칭) → (개선) 수요기업-공급기업(1차)-공급기업(2차)

- **(민간투자 확대)** 펀드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소부장 기업육성 추진
  - (펀드) 소부장 펀드를 지속 확대하여 차세대 유망기술에 중점 투자
    - \* 소부장 정책펀드 조성 : 1.6조원 규모(~'22년) → 2.5조원 규모 확대추진(~'26년)
  - (투자협력) 민간주도의 유망 소부장기업 발굴·투자 활성화를 위해,  
 민간투자유치 조건부 기술개발의 지원규모 및 지원분야 확대
    - \* 민간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 및 컨소시엄에 R&D지원 확대('23년, '22년 대비 20%증가)

- **(소부장클러스터 조성)** 반도체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차질없이  
 추진하고, 지역별 산업 집적도 등을 고려해 특화단지 추가지정 검토
  - \* 반도체(경기), 이차전지(충북), 디스플레이(충남), 탄소소재(전북), 기계(경남) → 추가지정 검토
- 설비투자·동반성장 등 특화단지 내 앵커기업의 역할을 확대하여  
 수요기업 중심으로 밸류체인 연계를 강화

- **(소재데이터 디지털화)** 플랫폼 중심 소재데이터 축적·활용 확산\*과  
 데이터·AI 서비스 생태계조성\*\*을 위한 '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' 수립
  - \* 소재데이터 플랫폼(ETRI) : 정부(4개 출연연구)·민관합동 연간 100만건 이상 축적·활용
  - \* 소부장기업 범위 개편,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, 출연연구 DB(250만건 규모) 민간 제공 추진 등

5 [공급망] 공급망 위기 대응력 부재 → 종합지원체계 구축

- **(위기감지)** 공관·코트라·무역협회·수입기업 등 가용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위기징후 조기파악을 위한 국내외 공급망 정보 모니터링
  - 16개 업종, 1,718개 품목의 Supply-Chain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연계한 GVC분석시스템 구축 및 위기감지 고도화 추진
    - \* **(정성정보)** 해외조직의 인적네트워크 활용 + **(정량정보)** GVC분석시스템의 기업데이터 및 무역데이터 분석 → 전방위적 위기감지시스템 운영
  - 주요품목 관련 수급현황 분석 제공 및 국내외 위기징후 발생시, 이를 관련기업에 신속히 전파(글로벌공급망 분석센터)
  - 중 코로나 봉쇄, 러-우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해 관계부처 동향 공유 및 대응방안 마련 지속
- **(소부장공급망 안정사업)** 단일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 간에 해당 품목 공급망의 효율화·안정화를 위한 사업 개발·지원

< 소부장공급망 안정사업 주요내용 >

<b>지원내용</b>	기술개발,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, 컨설팅, 재고확대, 규제개선, 국제협력 등
<b>선정절차</b>	공급망안정계획서 제출(기업→산업부) → 지원 적정성 검토(산업부) → 산업부장관이 선정 (단, 규제개선 및 특례 포함시 경쟁력위 심의를 거쳐 선정)

- **(제도적 기반 마련)** 「소부장특별법」 개정\*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,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  - \* 「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및 (추가)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발의(9.8일)
- **(통상협력 강화)** 핵심 광물·원자재 주요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, 협력 대상국 맞춤형 MOU(안)을 마련하여 양자 및 다자 협력 추진

## IV. 향후 계획

□ 「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」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마련

주요 정책과제		부처·기관
정책대상 확대	▶ 핵심전략기술 확대('22.10 고시 개정)	산업부
	▶ 원소재·범용품을 소재·부품·장비 범위에 추가하도록 소부장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	산업부
	▶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 신설	산업부
R&D 보완 혁신	▶ 신산업 소부장 R&D 투자 확대	기재부, 산업부
	▶ 소부장 대형 프로젝트 추진	산업부
	▶ R&D - 사업화 간 연계 강화	산업부
	▶ 1수요-1공급기업 연계 → 多수요-多공급 투자로 전환	산업부
	▶ 표준연계 R&D 의무화 추진	산업부
글로벌화 지원	▶ 해외 수요-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 확대	산업부
	▶ 기술개발·사업화·글로벌화 연계지원	산업부, KEIT, KIAT, KOTRA
	▶ 소부장 스타트업·강소기업·오픈기업 간 연계강화	산업부, 중기부
	▶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마련 추진	산업부
기업간 협력 생태계 확산	▶ 협력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	산업부, 융합혁신지원단
	▶ 소부장 펀드 지속 확대	산업부 등
	▶ 민간투자 유치한 기업간 컨소시엄에 정부 R&D 지원 확대	기재부, 산업부
	▶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 검토	산업부
	▶ 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 마련 추진	산업부
공급망 종합 지원체계 구축	▶ 위기감지시스템 고도화 추진	산업부, 글로벌공급망 분석센터
	▶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사업 지원	산업부
	▶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부장특별법 개정	산업부
	▶ 핵심광물·원자재 협력대상국 선정 및 MOU 체결 추진	산업부

## 참고

## 기존 소부장 대책 vs.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

		기존 소부장 대책 ※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('19.8월), 소부장 2.0 전략('20.7월) 등	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정책방향
① 대상	국가	<b>사실상 對日 중심</b> ※ 「소부장 2.0 전략」을 통해 對日 100대 품목 → 대세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, 구체적 지원수단 부재	<b>對세계 공급망으로 확장</b> ※ 핵심전략기술 확대(100개→150개) 등 실질적 지원수단 다수 포함
	산업	<b>우리나라 現 주력산업 중심</b> ※ 소부장 R&D 신규사업중 신산업 비중(산업부) : ('22) 9.3%	<b>첨단미래산업 확대</b> ※ 소부장 R&D 신규사업중 신산업 비중(산업부) : ('23) 24.0%
	품목	<b>고난이도 기술 중심</b>	<b>범용품, 원소재 등 포함</b> ※ 법상 소부장 범위 확대, 공급망 안정품목 신설 등
	유연성	<b>미흡</b> ※ '20년 핵심전략기술 선정후 변경 無	<b>상시적·주기적 변경 가능</b> ※ 핵심전략기술 주기적 재선정 등
② 지원	R&D	<b>개별기업 지원</b> ※ 수요기업 참여, IP-R&D 의무화 등	<b>관련 생태계까지 지원</b> ※ 대형 프로젝트, 다수 수요기업 연계, 표준연계 R&D 의무화 등
	사업화	<b>연구개발 완료후 연계</b>	<b>동시 기획·사업 추진</b>
	수출	<b>고려 미흡</b>	<b>글로벌화 전략 마련</b> ※ 글로벌 진출 사업까지 연계 지원
협력 생태계	<b>지정품목 중심 협력</b> ※ 100대 품목 신속한 공급망 구축	<b>시장수요 기반 협력</b> ※ 민간투자 확대, 경쟁제도 도입 등	
③ 방식	<b>사후 대응 중심</b> ※ 日 수출규제, 요소수 수급난 등	<b>사전 대응체계 구축</b> ※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	